

# 보행 위협 전동킥보드 견인 조례 '유명무실'

### 광주시, 올 1월부터 개정안 시행...지난달까지 견인전수 0건 자치구, 지원업체 없자 예산만 낭비...내년 거치대 설치 등 추진



# A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다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가로로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시작 부분을 전부 막아 지나가려는 사람들은 차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차도로 지나가야 해 위험하다"며 "보행선 등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좁은 길에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불편하게 기다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 대학생 B씨는 전남대학교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밤중에 길을 걷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B씨는 "야간에는 낮보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데 높혀져 있으니 더 안보였다"며 "학교 내 인도 뿐 아니라 차도에도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어 차들이 급정거 하는 위험한 상황도 본 적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길가에 무방비하게 놓인 전동킥보드로 시민들이 통행 불편 등을 겪고 있지만 광주시가 지난 1월 해결책으로

내놓은 견인조례는 1년 가까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

광주시 5개 구에서 민원이 적어 견인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견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 자동차 견인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의 장소에 주차차 시 신고 접수 후 20분 뒤에 견인하며, 이외 일반구역의 경우 1시간 뒤에 견인한다는 것이다.

또 견인료는 1대당 1만5천원이며, 1차적으로는 대여업체에 청구되고 이후 대

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듯 관련 조례를 시행한 지 11개월이 됐지만,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견인 전수는 0건이다.

게다가 광주시 5개 자치구 모두 견인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킥보드 견인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지난 9월경 전액 반납했다.

결국 조례는 개정됐지만, 견인업체가 없어 견인이 실제로 시행되는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에서 밝힌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건수는 광산구 192건, 북구 51건, 남구 31건, 서구 13

건, 동구 35건이다.

이는 안전신문고와 각 지자체에 신청된 민원을 집계한 것인데, 대여업체로 접수된 민원까지 합산한다면 실제 관련 민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된 민원 집계와 견인업체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전동킥보드 견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문 견인업체를 선정하려 했지만 집계되는 민원이 적다"며 "수익성 등의 문제로 업체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설치한 주차공간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지수습기자

# "코로나·경제 불황 '촉법소년' 증가 원인"

### 광주·전남 소년범죄 급증...서민수 교수 '맞춤형 예방책 강구해야'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육 변화와 경제 불황이 소년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추이에 따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3가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금은방의 유리창과 진열장 등을 깨고 내부에 침입,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주범인 A(16)군과 범행에 가담한 B(12)군, C(15)군이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 등은 '가솔 후 율동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범행에 동참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군에 대해선 보호자 인계 후 가정법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B군은 만 1

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도, 특수절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가벼운 처벌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범죄가 광주·전남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촉법소년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광주에서는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 전남에서는 2019년 299명, 2020년 342명, 2021년 560명 등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간·추행, 방화, 절도, 폭력 등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3년사이 광주에서는 377명이 늘어 134%, 전남에서는 87% 늘어난 것.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촉법소년이 늘고 있고 현재 범죄 추이에 맞는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청소년범죄를 담당하는 서민수 교수는 "흔히 금

은방 범죄 등은 성인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초등학생을 포함한 범죄가 주목되는 부분"이라면서 "최근 3년 촉법소년의 범죄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교육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이번범죄는 CCTV를 확인하거나 부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인 범죄에 비해 단순하고 허술한 형태의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과 교정기능을 통해 처벌과 제재를 막고, 경찰·검찰 등 사법부는 소년범죄 특성에 맞춰 특화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풀리는 연말로 경제 호황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 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특별방범 단속과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문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 경찰차·택시 충돌...3명 경상

출동 후 복귀하던 경찰차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8분께 서구 화정동 한 교차로에서 모 지구대 소속 A(40대)경위와 몰린 경찰차가 B(50대)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충돌했다.

사고로 A경위와 경찰차 탑승자 30대 순경 C씨, 택시 탑승자 40대 D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경찰차와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택시가 부딪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 시내버스서 성추행 7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광주 시내버스에서 탑승객을 성추행한 7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탑승해 자신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에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으로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복기자



"크리스마스 기다려주세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아이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민에게 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성탄트리 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설치·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산타복장을 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어린이들이 캐롤송을 부르며 사랑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김예기기자

### '5·18 정신적 손해' 원고 승소 판결 잇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에 따르면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인 문모씨와 그의 아버지 등 원고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받은 문씨는 5천240만원, 그 가족들도 49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문씨는 전남대학교 학생이던 1980년 5월 전남대 총학생회를 지원해 헌정절

서 파괴범죄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같은해 10월17일 체포된 그는 505보안대를 거쳐 상무대에 구금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했다.

내란부화 수행,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씨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2년에 서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씨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장애보상과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 받았으며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날 동일 재판부는 김모씨 등 23명의 원고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13부는 원고 23명 중 14명에 대해 647만원~2억4천266만원의 국가가 배상하고, 나머지 9명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체포·구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합직상 명백하다"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